

‘安風’ 전복으로 확산... 민주당 “속타네”

전북도민 여론조사 지지율 안 45% 민주 22.8%

민주 지도부 “10월 재보선 어떡하나” 고민 깊어져

‘안철수 바람(안풍)’이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여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여론조사 결과, 창당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유령정당인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갈수록 민주당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KBS와 전주MBC, 전북

도민일보가 전북도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도 ±3.1%)를 실시해 지난 28일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이 45.0%로, 민주당 지지도(22.8%)의 배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를 동안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큐리서치에 의뢰해 전북도민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08%)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의원이 신당(이하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45.5%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32.3%), 새누리당(7.9%), 통합진보당(2.7%), 진보정의당(2.3%) 순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지역 관계자들은 “이미 올 초부터 ‘안철수’에 기대하는 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호남에서의 ‘안풍’ 확산 현상은 다가올 10월 재보선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

당 이상직(전주 완산읍) 의원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으면서 재보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전남에서도 나주·화순 등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북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피부라도 안철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한길 대표 등 재도보가 호남에 어느 지도부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풍은 쉬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그동안 확산양상을 보이던 ‘손학규-안철수 연대설’의 불

같이 잡힌 데 대해 안도하는 기색이 없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최근 독일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민주당 중심론’을 역설하며 ‘손-안 연대’에 대해 분명하게 선 긋기를 한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풍이 10월 재보선 등을 거치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안풍 확산’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직 ‘안철수 현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만 잘하면 거품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악한 노동문제 정치 이슈화해야”

안철수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28일 열악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지난 25일 강연에서 “안 의원의 정치조직화된 활동이든 이런 것에서 노동문제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안 의원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근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데 정치권과 사회가(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 오래”라며 “이(노동) 문제가 중요한 정치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최장집 교수님의 원래 소신이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안 의원이 추진하는 정당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안 의원의 일부 측근들은 “최 이사장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4선의 원혜영 의원 주도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창립 포럼’에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중민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초청돼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도 ‘독일 배우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 등 해법 찾자
의원 80명 ‘혁신과 정의나라’ 포럼 발족

야권에서 ‘독일 배우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통일 모델에서 교훈을 찾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정치혁신, 남북평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이다.

당장, 야권 의원 8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의원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29일 발족했다.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77명과 통합진보당 3명, 진보정의당 4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모임을 주도한 원혜

영 의원을 비롯, 전병헌 원내대표와 추미애, 김영환, 김성곤 유인태, 박영선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그룹을 비롯해 전체 의원의 60%가 참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도 포함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아예 독일에 머무르고 있다.

포럼은 이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중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매 주 수요일마다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내달 3일 2회 포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비롯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크리스토퍼 풀만 한국 에버트재단 소장 등이 잇따라 강사로 나선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모임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인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고 통합된 국가로서 그 존재를 뚜렷이 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남북 통일 과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 발족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을지 모르나, 상당부분 현 정부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분 경제민주화 사안이 의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회가 잘 협의해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 내에서 경제민주화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트위터 정치’ 박근혜와 대립각 세우나

메시지팀 보강 현안 적극 개선 나설듯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 정치’를 통해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복합이 ‘6자 회담을 통한 대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트위터에 “관련국들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언급한 ‘시간제 근로’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많은데 우리는 정반대”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답”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에는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례가 법과 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자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이 말한 노사정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효과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메시지 팀도 일부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황주홍·새누리 유승우 의원 주도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전국 시민네트워크’ 구성

민주당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시민네트워크’ 구성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29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의원의 눈높이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논의돼야 한다”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 모든 시민세력이 참여하는 전국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당이 기초선거에 공천함으로써 공천과정을 전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종 정당행사와 경선 참여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에 봉사하려는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권 국회의원들에게 증식

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에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백해무익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시민세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지만, 정당공천 폐지 후 여성명부제(여성할당)를 도입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경매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수합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옥선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